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649
----------	------

발의연월일 : 2024. 9. 4.

발 의 자 : 박해철 · 한민수 · 이수진
김정호 · 송옥주 · 김승원
김남희 · 서영석 · 안태준
임호선 · 박홍근 · 박균택
정성호 · 임광현 · 전재수
의원(15인)

제안이유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임금체불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 2023년 임금체불액은 1조 7,845억 원이었고, 임금체불을 신고한 노동자는 27만 5,432명이었음. 올해에는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됨.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약 1조 436억 원이 발생했기 때문임.

임금체불을 예방하여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음.

이에 임금체불을 예방해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직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고의·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형사처벌 외에 정부지원 제한 등 각종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나아가 보다 효율적인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서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요건도 낮추는 등 임금체불 예방제도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 적용범위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확대함(안 제37조).
- 나. 체불사업주의 명단공개 기준을 체불총액 3천만 원 이상에서 2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함(안 제43조의2).
- 다. 상습체불사업주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43조의4 신설).
- 라.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의5 신설).
- 마.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제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 전산망 이용 및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6 신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제36조”를 “제36조, 제43조”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를 “제2항에 따른 날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 본문 중 “수당”을 “수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등”으로, “3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43조의4부터 제43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4(상습채불사업주의 결정) ① 상습채불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한다.

1. 임금등 채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임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퇴

직급여등은 제외한다)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한 사업주

2.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임금등을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사업주

② 제1항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를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임금,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임금등 체불횟수의 산정 및 제2항에 따른 소명 기회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5(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제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요구할 때에는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 법률에 따른 각종 보조·지원사업의 참여 배제나 수급 제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나 낙찰자 심사·결정 시 감점 등 불이익 조치

②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자료를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은 제43조의 3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43조의6(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43조의3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43조의5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이하 “자료제공등”이라 한다)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1. 법원행정처장에게 체불사업주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국세청장에게 체불사업주의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법인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3. 국세청장에게 체불근로자의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4. 근로복지공단에 체불사업주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따른 월평균보수에 관한 자료, 「고용보험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자료,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다른 대지급금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나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지연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습체불사업주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등의 체불을 확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 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 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 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 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 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 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 이자) ① -----제36조, 제4 3조에----- ----- ----- ----- -----제2항에 따른 날까 지----- ----- ----- ----- ----- ----- ----- ----- ----- ----- -----.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제36조에 따 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 만 해당된다)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

② ~ ④ (생략)

<신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① 상습체불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한다.

1.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임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등은 제외한다)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한 사업주

2.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임금등을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사업주

② 제1항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를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임금,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임금등 체

<신 설>

불횃수의 산정 및 제2항에 따
른 소명 기회 제공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43조의5(상습체불사업주에 대
한 보조 및 지원제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
의 목적으로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국가, 지방
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요구할 때
에는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개
별 법률에 따른 각종 보조·
지원사업의 참여 배제나 수급
제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나 낙
찰자 심사·결정 시 감점 등
불이익 조치

<신 설>

②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자료를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은 제43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43조의6(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43조의3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43조의5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이하 “자료제공 등”이라 한다)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1. 법원행정처장에게 체불사업주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국세청장에게 체불사업주의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법인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3. 국세청장에게 체불근로자의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4. 근로복지공단에 체불사업주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따른 월평균보수에 관한 자료, 「고용보험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자료,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대지급금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p><u>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u> <u>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u></p> <p>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 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나 사용 료 등을 면제한다.</p>
--	--